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방재정

- (한국)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출현황 분석

지방행정

- (일본) 「탄소중립」 중기목표와 제로카본 홋카이도(北海道)_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의 개정을 사례로
- (일본) 일본의 지역 방재력 향상을 위한 해저드맵 작성 및 활용사례

지역발전

- (미국) 보스턴(Boston)시의 혁신 사무실_뉴 어번 메카닉스(New Urban Mechanics_NUM)
- (미국) 텍사스 주 San Antonio의 주민참여 제도-CivTechSA

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출현황 분석

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

- 기피시설은 외부불경제를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·간접적인 피해를 끼침
 - 발전소는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로 대기오염물질, 악취, 소음 등을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발전소가동에 따른 편익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하게 떠안고 있음
 - 따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
각 사업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현황 파악

-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(지방재정365)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현황을 회계별·기금별로 파악 가능
 - 회계별 세출현황에 각 회계 및 기금을 통해 시행된 사업의 세부 명칭과 사업을 시행한 부서, 세출의 통계목, 지급내역 그리고 최종 지출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
 - 2020년을 기준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명칭에 ‘발전소’가 포함된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간주함
 - 통계목은 「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」 별표 11(세출예산 성질별 분류)을 따름

지출내역 분석결과

- 2020년 기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103개 단체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
 - 지출내역은 크게 경상이전, 내부거래, 물건비, 예비비 및 기타, 용자 및 출자, 인건비, 그리고 자본지출의 7개 그룹으로 구분되었음
 - 주민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내부거래, 예비비 및 기타, 용자 및 출자를 제외할 경우, 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자본지출로 약 7억3천만 원의 지출수

준을 나타내고 있음

- 자본지출 다음으로는 경상이전 그룹이 평균 3억2천만 원의 지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
- 이러한 결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예산이 주로 시설물 건축 및 개보수나 민간의 자본금 형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주민에 대한 현금성 보조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

【 표 1 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성질별 지출 분류

(단위: 백만 원, 회)

그룹	편성목	평균 금액	빈도
경상이전	민간이전, 일반보상금, 자치단체 등 이전, 차입금 이자상환, 출연금	324.21	68
내부거래	기금전출금, 기타회계전출금, 예탁금	2,874.94	9
물건비	업무추진비, 여비, 연구개발비, 일반운영비, 재료비	34.92	77
예비비 및 기타	반환금기타	77.28	64
용자 및 출자	용자금	283.76	17
인건비	인건비	62.97	11
자본지출	민간자본이전, 시설비 및 부대비, 자산취득비,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	733.94	227

자료: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분야별 세출현황 재구성

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출내역 분석결과

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성질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이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
 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시와 군 유형임
 - 시의 경우 자본지출을 통한 지원이 규모나 빈도 측면에서 약 4~5배 정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
 - 군에서도 자본지출을 통한 지원이 경상이전을 통한 지원보다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만, 그 차이의 크기가 시보다는 상당히 작게 나타남
 - 이러한 결과는 군 지역의 인구밀도가 시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피해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보다는 현금성 보조 등의 단기적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표 2 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성질별 지출 분류: 지방자치단체 유형별

(단위: 백만 원, 회)

단체 유형	그룹	평균 금액	빈도
광역시	경상이전	0.00	0
	자본지출	705.97	6
시	경상이전	185.01	20
	자본지출	961.16	89
군	경상이전	396.53	46
	자본지출	737.32	97
자치구	경상이전	52.94	2
	자본지출	151.60	35

자료: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분야별 세출현황 재구성

시사점

-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원칙적으로는 자본지출을 통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
 -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

김봉균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)